

정찬웅의 정책포커스 (제 11 회)
수요관리 중심의 물관리정책, 왜 필요한가? (가제)

- 방송일시 : 2005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10시 00분 (60분)
- 녹화일시 : 2005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 00분 (60분)
- 진행 : 정찬웅(前 청와대 인사수석, 現 NGO 대사)
- 연출 : 김승훈
- 작가 : 윤복실, 이신정
- 자료조사 : 김태현
- 출연자 : 고철환 위원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최동진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오프닝

정찬웅

안녕하십니까, 정책포커스 정찬웅입니다.

물관리 체계 개선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물관리 체계 개선을 논의했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회의는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오늘 정책포커스, 그 동안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효율적인 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출연자 소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 위원장, 반갑습니다~

고철환

(인사)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인 최동진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최동진

(인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란?

정찬웅

1> 고철환 위원장님, 이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기 위원장이 되

신지 만 2년이 됐는데, 햇수로 3년 됐습니다. 만2년 동안의 소감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고철환

정찬용 2> 그런데 아직 많은 국민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철환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란 뜻으로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등장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9월에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직후 정부 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특별대사직을 만들었다.)

정찬용 3> 지속가능발전이란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 경제개발을 막지 않으면서 환경,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기후에 관한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터부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동진 최근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피해와 지진 등이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책임이 있고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들이 소극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토협약의 이행을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찬용 4> 고철환위원장께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물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란 직함도 그렇지만 시민환경단체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고철환

▶물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정찬용 5> 2001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11년에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댐을 더 지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시

민단체들은 이 계획이 물수요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으며, 댐건설 예정지에서는 댐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시위도 격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요?

고철환

정찬웅 6> 이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물관리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관리 정책의 개선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체로 만 2년이 걸린 셈인데,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고철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요예측치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수요예측에 대한 불일치 등으로 인해 오래 걸렸음. 현재는 이견이 수렴되어 어느 정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 보완작업이 내년 7월에 완료되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이제, 수요관리중심의 물관리로

정찬웅 7> 이번 방안 중에 반가운 것은 물관리가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동진 그동안의 단기간에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과 광역상수도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온 결과로 오늘날 상하수도 보급률이 선진국수준에 이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부족을 못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규모 댐개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댐 주변지역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들이 생겼다. 간단한 한가지 지표로 취수율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취수율은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우리나라의 취수율은 36.5%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더 이상 추가적인 수자원의 개발은 곤란한 수준이다. 즉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우리는 지속위 연구팀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고철환 그동안 수요관리정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 그러나 2000

년에 들어서야 생활용수 위주로 시행되었고, 농업용수는 실적이 없으며 공업용수는 연간 3천만톤(총공업용수량의 1%) 정도에 그쳤음. 수요관리방법도 노후관 교체나 절수기 보급 등으로 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수요관리정책의 핵심은 “물 수요관리 10개년(’07~’16) 국가종합계획”의 수립.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재 환경부의 ‘16년 수요관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2016년까지 늘어나는 수요증가분의 50%이상을 수요관리로 대처하는 것. 만일 이 계획에서 제시된 수요관리 목표량을 달성하게 된다면, 일부 산간 오지 지역이나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물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수요관리 방안으로 수요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 등 물절약형 용수관리체계를 정착시키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절수기·중수도 설치 등 물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포함.

정찬웅

8> 그동안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수요관리를 하면 물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교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수칙에 대해서 단순 산술계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동진

먼저 물부족이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물부족은 강수량이 많음에도 인구가 많아서 인구 1인당으로 계산했을 경우 이용가능한 물이 세계평균의 1/10에 지나지 않다는 의미이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양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물부족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물을 과다하게 이용해서 하천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위의 수요관리 목표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친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의 물부족에 대해서 건교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위에서는 기존의 2001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물 부족에서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을 반영시킬 경우 물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견해에 대해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다 크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1년 수자원 장기종합계

획 수립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통계자료는 1998년까지의 물이용 자료였기 때문에 1990년대말 이후, 특히 IMF이후 물이용의 정체를 가져온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환경부의 수요관리계획도 2006년까지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수요추정시 적극적인 수요관리목표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두가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과 2016년의 물부족이 과다하게 추정되었다. 지속위에서는 2001년의 생활용수와 2003년의 공업용수의 실제이용량과 추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해서 이를 보정했고, 다음으로 2001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06년 이후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수요관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지속위에서는 직접 수요추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었고, 지속위에서 제시한 목표치에 대해서 여러번 부처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부처와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지속위에서 제시한 수요관리 목표치를 반영하여 2016년의 물수요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고철환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16년 수요증가의 50%이상을 수요관리로 대처하려면, 생활용수(1인 1일 급수량)를 10% 정도 감축('02년 362리터--> '16년 326리터)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6%('02년)에서 40%('16년)로 개선하며, 농업용수도 '02년 기준으로 10% 이상 수요관리를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이 합의. 농업용수는 아직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외하더라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절감량을 개략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10.6억톤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음. 그리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추정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부족량 수치와 실제 측정한 수치와의 차이가 합치면 12.7억톤임. 이 수치를 합치면 23.3톤이고, 이것은 '16년 부족량이라고 예상했던 22.7억톤에 비하면 0.6억톤이 남는 양. 물론 이것은 단순계산이지만,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어서 계산해본 것임. 즉, 정책 실천을 독력하기 위한 의의가 있어서 계산해본 것임.

정찬웅

9> 물 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빗물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빗물 이용이 상

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최동진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물이용을 지나치게 댐과 하천에 의존하다보니 다양한 다른 대안을 이용하는데 소홀했다. 빗물이용이 댐과 하천과 같은 대규모 수자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농어촌이나 도서, 산간지역 등 물부족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댐은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가?

정찬웅 10> 2000년 9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에는 동강 댐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댐개발에 대한 논란은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하신대로 수요관리 정책이 제대로만 추진 된다면 더 이상 댐은 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철환 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관개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지만, 발전이나 홍수조절도 빼놓을 수 없는 목적. 수요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댐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과거에 과다추정된 수요에 추측에 기초한 댐건설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검토결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댐건설을 추진해야 함.

최동진 전국적인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 물부족이나 이상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물부족의 경우는 대규모 물부족이 아닌 국부적 혹은 일시적 물부족이므로 댐건설보다는 다른 형태의 대안들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정찬웅 1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안에 보면 댐을 건설하는 정책에서 댐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제안 하셨는데, 댐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동진 기존 댐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댐의 연계운영이고, 두 번째는 댐에 설정된 용수배분량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댐의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댐의 안전도에 대한 재평가도 중요합니다.

▶ 수질관리의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정찬웅 12> 90년대 초반 낙동강 폐놀사태 이후 국민들의 수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도 98년부터 05년까지 약 26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동안의 수질관리는 주로 하수관거 연장이나 하수처리장 건설에 치우쳐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고철환 비점오염물질이 수계오염부하의 22-37%차지. 향후 증가 추세. 고령지 농업 증가로 인한 토사유출 때문에 호수 수질 악화. 사전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식이 바람직. 4대강 수계 오염총량제 실시 추진(한강은 현재 임의제이나 향후 의무제로 추진). 관리대상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고령지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 필요.

최동진 BOD 중심의 수질환경기준도 개선되어야 함. 실제 하천의 부영양화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소와 인인데 수질환경기준은 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음.

정찬웅 13> 말씀을 들어보면 비점오염원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최동진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BOD 중심의 수질환경기준을 개선하며, 수변구역내 오염원 및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의 자율매수를 통해 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 음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대책

정찬웅 14> 우리가 이용하는 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마시는 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농어촌에 가보면 아직도 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마시는 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

히 많습니다. 농어촌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소외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대한 물공급이랄까 서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고철환

상수도 보급에서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는데에는 중앙-지방 논리보다 국민 전체 복지 차원에서 접근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원 확보. 다양한 식수공급 대책 개발 필요. 간이상수도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하되, 지역의 적극적 동참 유도 필요.

최동진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정부 대신에 간이상수도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질검사와 유지관리,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많은데 지하수와 계곡수 등의 수원을 이용한 소규모 수도기술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인구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소규모 토착형 상하수도 기술의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고 시장도 넓습니다. 빗물이용시설도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정찬웅

15> 지하수 공개념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뜻이 무엇입니까?

최동진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를 토지의 소유에 부속되는 것처럼 인식하여 왔고, 따라서 개발과 이용에 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지표수와 함께 순환하며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지표수와 다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수 공개념은 지하수가 이제 더 이상 토지의 소유에 부속되는 자원이 아닌,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찬웅

16> 그동안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운동단체의 주장에서도 지하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지하수가 특별히 관리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미래세대와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나눠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고철환

지하수 이용량 및 개발량에 대해 전문가간 이견 크고,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도 컸음.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여 난개발과 폐공방치도 심각. 오염방지시설이 없어서 처벌이 경미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시설이 81.6%로 통제와 관리가 곤란. 지하수 관리 예산도 건교부 수자원관리예산 1.8조원 중 121억원(0.7%)에 불과.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관리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충. 지하수 이용시설 기준 강화를 통해 음용수로 이용을 확대할 필요.

최동진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땅속에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리에 지표수보다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부존량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지표수에 비해서 몇 배에서 몇 십배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보면 지하수 이용량이 전체 물이용량의 11%인데 지하수 관리예산은 물관리 예산의 0.7%에 불과합니다. 지하수는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일차적인 식수원이며, 오염된 지표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체 자원이므로, 지하수의 수량-수질 측정망을 확대하는 등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홍수총량제도입

정찬웅

17> 이번 정책보고에서는 홍수총량관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나라 강수의 특징은 여름철 집중호우라 강수량이 만만치 않은데, 홍수는 홍수대로, 가뭄은 가뭄대로 그렇게 걱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최동진

그동안의 치수정책은 댐과 제방을 쌓고 하천을 직강화해서 비가 내리면 최대한 빨리 물이 하천분류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천분류에 홍수량을 집중시키다 보니, 분류 하류구간에 홍수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 최근 돌발홍수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의 증가는 더 이상 댐과 제방으로 홍수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총량관리는 비가

유역 내에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홍수량도 유역 내에서 고르게 분담하게 해서 하천본류구간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고철환

제방축조 중심의 홍수관리에서 다양한 홍수관리대책(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등) 수립 필요. 자연형 하천 조성으로 하천의 생태계 복원과 홍수 방어 능력 제고 동시에 달성. 홍수에 대비해서 사회기반 시설이나 저지대 건축물의 설계 기준 강화 필요. 가뭄에 대비해서도 무조건 댐건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수원 확보 필요. 산간 오지 지역에는 다목적 댐을 아무리 지어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짐.

▶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정찬웅

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물관리위원회 신설안을 내놓으셨는데, 우선 원론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 물관리란 무엇입니까?

고철환

물관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원칙과 목적하에 물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 따라서 물관리에는 수자원의 소유권과 수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원칙,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물을 관리할 것인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포함.

정찬웅

19>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최동진

부처별, 용도별로 분산되어 있고, 행정구역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다목적 댐건설과 광역상수도는 건설교통부에서, 농업용댐과 농업용수는 농림부에서, 식수전용댐과 생활용수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홍수관리는 건설교통부와 소방방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도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역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찬웅

20> 이번에 논의된 물관리 위원회 설치에 어떤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고철환

물관리체계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통합적 원칙과 계획이 있어

야 체계적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물관리가 가능함. 기존에도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97-'04.9)가 있었으나, 이번에 제시된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대한 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단순한 정책 권고 차원의 조정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조정 및 방향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가 수행하는 물관리가 수요관리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협조하도록 할 것임.

정찬웅 21> 상수도 관리 일원화 문제는 부처간의 이견이 심해서 현재 총리실에서 조정중인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시기에 상수도 관리 일원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동진 상수도 관리의 당면과제는 이제 건설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에는 계획이 분리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축소하고 통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이 일원화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과 감독권의 문제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 특히 특정 부처가 광역상수도사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부터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은?

정찬웅 22> 오늘은 물에 대한 주제였지만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최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최동진 지금까지 주로 갈등의 조정과 해결이 과제였지만 앞으로는 30년~100년 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세우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물기본법을 만들고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러한 작업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찬용 23> (앞 말씀 정리하시고...) 고위원장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이번 대책의 향후 계획과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계획은 어떤지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고철환 전체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많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내용적으로 지원하고, 수요관리 위주로 물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할 계획임.

정찬용 예비질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나라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국제적인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다른 나라와 연계도 하고 계신가요?

정찬용 (말씀 정리하시고...) 두 분, 오늘 말씀, 잘들었구요..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철환/최동진 (인사)

클로징

정찬용 공급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이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이행될는지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좀더 나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를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자연자원의 조심스러운 이용과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을 유지할 것을 핵심전략으로...

정책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